



등유세 인하가 '에너지복지'

원안통과되면 400만가구
연 11만원씩 비용 절감

특소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서민용 에너지를 바라 보는 정부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부과금을 내릴 계획이고 국고를 책임지는 재정경제부도 관련 세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조정식의원(열린 우리당, 시흥 을)이 등유 특소세 인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마자 관련 부처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호응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년여 전부터 서민용 에너지 비용 인하의 필요성을 느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조정식 의원은 그간 유관 정부부처를 협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 세 인하의 당위성을 이해시켜왔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민용 난방연료비 부담이 큰 데는 200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세계개편의 과정에서 등유세금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인데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성과도 거뒀다.

17대에 국회에 첫 입성한 조정식의원은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 하나에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 무척 신중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법안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꼼꼼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등유세 인하 법안 역시 1년여의 공을 들이고 정부와 당을 설득시킨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었던 셈이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곧 ‘에너지복지’ 라고 강조하고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산자부 등이 고맙다고 말하는 조정식의원을 만나 대표발의법안의 내용과 진행 과정 등을 들어 봤다.

▲특소세 인하법안을 발의하신 배경은 무엇인지?

- 등유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의 달동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서민용 동절기 난방연료인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난방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등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가 되는데 소득이 훨씬 높은 중산층 이상에서는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영세 서민들은 비싼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등유로 난방을 할 경우 도시가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농어촌 가구의 평균 소득이 도시가스 사용자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이나 도시 달동네 등유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비용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 비해서도 난방연료비 부담이 높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서 저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등유에 소비세 명목으로 5%의 세



금만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서민용 난방연료비 부담이 큰 데는 200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세제개편의 과정에서 등유세금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인데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진행 경과는 어떤지?

- 등유 특소세를 현재의 리터당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가 관장하는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등유에는 예특회계 재원이 되는 판매부과금이 리터당 23원씩 매겨지고 있는데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특소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부도 일단은 긍정적인데 구체적인 세금 인하 폭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

재정부에서는 등유 특소세를 지금보다 리터당 15원 정도 내리고 또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중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다만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서민 난방 연료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크게 호응하지 않던 재정부가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성의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대표발의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과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본격적인

심의회는 9월경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재경부나 산자부, 에너지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거나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단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고민중이다. 등유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과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경부를 설득시키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408만 가구에 달하는 등유 사용가에서 연간 약 10만7000원의 난방비가 절약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등유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한 해법은?

- 등유 세금이 인하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의 특소세 세율조정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등유와 LNG간의 과도한 세율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20원 내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LNG의 특소세를 종전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시켰다.

등유 세금은 내리고 LNG 세금은 올리는 조치에 대해 표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막대한 세수가 순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월에 등유 특소세를 20원을 내리면서 세입이 1271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LNG 특소세 인상으로 무려 5412억의 세수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세율 조정으로 정부는 앞서서 4141억원의 세수 순증효과를 누린 셈이다. 이번 법안 역시 등유 특소세를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게 되면 올해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6984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겠지만 반면에 지난해 단행된 LNG의 세수 인상으로 6052억원으로 늘어나 순수한 세수 감소액은 93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LNG의 소비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등유는 사용량이 가파르게 줄어 들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추세라면 이번 대표발의 법안의 시행이 예상되는 2008년도에는 거의 세수 감소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도에는 오히려 2352억원의 세수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서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할 경우에도 에특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2조5000억원중 약 4.6%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등유 사용량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여서 어느 정도의 예산 감소는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다.

산자부의 정세균 전 장관이나 김영주 현 장관은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복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등유 판매부과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산자부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흔쾌히 전달하고 있고 에특회계의 예산도 부과금 폐지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등유 소비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나 저소득층들로 난방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효과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판이나 생계형 수송연료인 경유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